

중국·아세안 FTA 창설 합의 배경과 의미

(張蘊嶺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소장)

1)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에 대한 기존의 논의

□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이후 정식으로 시작되었음.

- 동아시아의 경제회복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이 노력하자는 취지였음.

□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쳐 왔음.

- 즉, ① 1998년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행장급 회의 개최, ② 1999년 정상간 8개항 합의, 공동성명 채택,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 등 협력 사항 구체화, 김대중 대통령 제안으로 장기 협력과제 연구소조 「동아시아비전그룹」 창설, ③ 2000년 통화스왑협정 체결 등 금융협력 본격화, 2001년 경제장관 회의 개최 정례화 합의 등임.

□ 2001년 11월 각국 정상들은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이 건의한 장기협력 방안을 심의하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에 공감함.

- 「동아시아비전그룹」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현재의 10+3 협의체를 동아시아 협력체로 개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정치, 문화, 교육, 안보 등 전면적인 협력 추진 등 장기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 밖에도 한·중·일 3국간에는 해당국 국책연구소가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바, 각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은 한국의 KIEP, 중국의 DRC, 일본의 NIRA 등임.

- o 일부 프로젝트에는 각국 정부의 국장급 관리도 참여, 일부 APEC 고위급 회담 성격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는 역내 국가간 발전 격차가 크고, 특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원래 경제협력체는 아세안+3에서 아세안이 제안한 것인바,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아세안 각국은 주도적 지위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는 계획도 최근 당사국들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음.

2) 중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안의 배경

□ 2000년 11월 아세안+3 회의에서 아세안국가들이 중국의 WTO가입이 아세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주룽지 총리가 중국·아세안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관련 연구 추진을 제안하였음.

- 아세안 각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몰리게 되고 아세안으로의 유입은 줄어들 것이라며, 아세안이 무역 및 투자부문에 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함.

○ 주룽지 총리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연구 제안은 중국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당시 주총리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동남아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임.

- 중국측의 제안은 중국의 WTO 가입이 양측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유리하며, 중·아세안간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은 전체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협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미 일본과 한국은 10+1 혹은 1+1 형태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왔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주룽지 총리의 후속조치로 중국과 아세안 양측 정부부처 관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그룹을 구성, 중국의 WTO 가입 영향과 중·아세안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음.

- 금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시 전문가그룹의 연구결과가 아세안과 중국 정상에게 보고되어 양측이 금후 10년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정식 합의하였음.
- 상기 전문가그룹은 지난 1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몇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음. 주요 내용은 첫째,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가져올 것이며, 둘째, 아세안의 FDI 감소는 중국으로의 유입 증가 때문이 아니고 아세안의 정치불안 등 자체의 환경악화 때문이며, 셋째, 중국의 발전은 아세안에게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 등임.
-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수출품의 핵심부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세안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경합도가 낮기 때문에 무역 및 투자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전문가 그룹은 아세안과 중국간 FTA의 형태는 EU나 북미 등의 경우를 참고로 하되, 아시아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것을 건의함.
- o 예컨대 보호 상품을 별도로 언급하여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고, 아세안의 신규 회원국들을 배려하여 과도기간을 허용

□ 중국과 아세안간의 FTA의 발족 시기를 10년 뒤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임.

- 첫째, 아세안내 자유무역지대가 현재 진전 상황으로 미루어 2010년에나 완성될 수 있으며, 중국도 WTO 가입 후 5년간의 과도기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 최소 5년간은 중국과 아세안간 무역관계를 재조정 기간이 필요함.
- o 둘째,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협력과도 관련이 있는바, APEC 역내 무역자유화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비전그룹이 제안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건설 목표시기도 향후 15년 이내임. 따라서 금후 10년내에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지대가 실현되면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음.

3)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기대효과

□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임.

- 중국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체 아시아지역으로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
- o 10년내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실현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APEC 역내 무역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전체 동아시아지역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아세안간의 FTA 창설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거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함.

-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으로써 무역과 투자 증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이 지역의 전체 인구는 18억 명에 달함.
- 또한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화 속도를 높이고, 아세안 신규 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함.

- 첫째,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아세안 경제도 회복되어야 함.
- 둘째, 중국은 아세안 신규 회원국에게 일방적인 시장개방과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양측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개방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함.

